

“신흥시장 인도와 교류 수출국 다변화”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 정기회

도내 유일한 국제교류 분야 경제단체인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이하 강국회)가 내년 신흥 수출시장인 인도로 국제교류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국회는 6일 춘천 라데나CC에서 2017년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안을 논의했다.

고광만(동양아이텍 대표) 회장은 “올해는 6월 베트남 토털마케팅에 참가하고 9월에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가들과 골프 및 투자 수출상담 교류를 하며 어느 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며 “내년에는 신흥수출시장으로 주목받는 인도 등으로 교류국을 더 다변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강국회 회원사로 춘천에 본사를 둔 가드레일 전문 제조업체 (주)효명(대표:심기웅)은 올 6월 토털마케팅 참가 이후 베트남 진출에 탄력을 받아 현지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가드레일의 300억원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는 6일 춘천 라데나CC에서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고광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5차 정기회를 가졌다. 박승선기자

올해 회원사 해외진출 성과 커 신규 국가로 유통망 확대 목표

포이호성(주)산돌식품 대표, 이미옥 해송KNS 대표 등 식품 제조업체들도 현지 진출에 나선 상황이다.

이희종 강원일보사장은 “내년 최

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경영인으로서 견문을 넓히는 데 힘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올해 추진한 회원사 탐방을 이어가고, 강사 초청특강, 포럼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정

기회에는 고광만 회장을 비롯, 박종인 광산 대표, 김숙영 태영산업개발 대표, 김지현 엔투어 대표, 박광구 비통 CHC 대표, 박용성 태백건설산업 대표, 신지용 한옥과 문화 대표, 엄기현 거화 대표, 유제황 한일 TNC 대표, 이원복 MS마트 대표, 최성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하림기자

내년 핵심사업 국비 800억원 확보

【춘천】속보=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의 당초예산(본보 지난 6일자 1·3·9면 보도)에 총 800억원의 춘천지역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존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증액시킨 사업 예산은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평가비(2억원)를 비롯한 5개 사업 예산 등 67억원이다.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평가비는 내년 하반기 수립 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제2경춘국도 등 정부 미반영 5개 사업 67억원 증액 65개 정부 반영 사업비 733억 국회 삭감 없이 통과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용편익(B/C)을 높이는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지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억원과 강원지방경찰청 청사 리모델링비 10억9,000만원,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비 9억원,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비용 29억5,000만원이

각각 새로이 반영됐다.

총 65개 정부안 반영 핵심사업비 733억원도 국회에서의 삭감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전망된다. 번개시장 도시재생사업비(17억원) 소양재정비 촉진사업비(17억원) 캠페이지 그린빛물인프라 조성사업비(38억원) 등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비(45억원)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2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15억원) 등도 내년 국비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춘천시와 함께 예산 관련 부처를 꾸준히 설득해 핵심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특히 제2경춘국도는 확실히 쟁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

도 내년 예산 5조 6744억 …사회보험료 지원금 70%만 반영

도의회 예결특위 확정·의결
사회보험료 30% 시·군 부담
레고랜드 기반시설 전액 삭감
올림픽 방한대책 1억여원 반영

2018년 강원도 예산안이 5조 6744억 원 규모로 6일 사실상 확정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이날 4조 7278억원 규모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9466억원의 기금을 확정, 의결했다. 예결특위의 감액을 거쳐 조정된 예산규모는 205억 2989만원이다. 이번 심사에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사업명	중액예산액
동계올림픽 대비 긴급 방역비	1억원 (신규)
개폐회식 관광객 승하차장 방한대책	1억2400만원 (신규)
올림픽전통건축디자인개발·용기제작지원	2억5000만원 (신규)
미시경터널 통행량증대사업추진	1억원 (총 6억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9억원 (총 11억 1500만원)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30억원 (원주본소 15억원, 강릉·태백·북부지소각 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 5000만원 (형성 봉복사 2억 5000만원, 평창 극락사·강릉 청학사 각 1억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1억원 (총 4억 7250만원)

시행, 관심을 끌었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초 418억원 중 125억 4270만원이 감액돼 292억 6630만원이 반영됐다. 도가 최저임금 인상대책의 일

련고한 사업비의 50%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여전히 큰 규모의 부담을 지게 됐다. 입장이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시·군별 부담 예산은 원주시가 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21억원, 강릉시 18억원 등이다. 지원규모가 가장 적은 양구군도 1억 7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당초 예산심사가 끝난 시·군은 내년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게 됐다. 일자리 공제지원사업은 23억원 삭감 후 69억원을 편성, 25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500명만 예산만 편성했던

상임위 결정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강원 상품권 제작 및 홍보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 설치는 36억원 전액 삭감됐다. 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연관 사업들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어났다.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승하차장 방한대책에 1억 2400만원이 새로 반영됐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우려해 동계올림픽 대비 긴급 방역비 1억원도 세웠다. 예결특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통해,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김연진 beatle@kado.net

도 예산 8개월이 한계, 법안 개정·지원 없을 땐 '빚더미'

도, 경기장 유지관리 24억원
기념관 건립 2억 편성·의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표류
연간 적자 101억원 발생 부담

6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에 평창올림픽 사후관리 국가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으면서 도가 도비로 경기장 8곳에 대해 유지 관리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도의 예산 적용기간은 내년 말까지 8개월로 사후관리를 뒷받침 할 법안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사후관리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장 유지관리비 24억원,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기념관 건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경기장 유지관리비는 빙상 경기장 5곳(스피드 스케이팅·강릉 하키센터·관동 하키센터·아이스아레나·소프트랙 보조경기장)과 실상 경기장 3곳(슬라이딩 센터·정선 알파인센터·보광 스노보드) 등 8곳에 투입된다. 패럴림픽까지 끝난



후 각 경기장의 소유권은 내년 4월 중순 강원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장 8곳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소진 시점을 내년 말까지 보고 있다. 사실상 8개월간 시·군 사후관리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안이 확정되지 않고 시설물 사후관리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간 101억원 3100만원의 적자 발생 등 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사후관리 TF팀은 이날 말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문체부 TF

강원도 2018년 국비확보 주요 내역	예산(억원)
원주-제천 철도	1500
포항-삼척 철도	1246
춘천-속초 철도	100
국도5호선(춘천-화천)	208
제2경춘국도 건설 타당성 조사 평가용역	2
올림픽 시설 효율적 유지관리 용역	2.5
평창ICT동계올림픽 추진	9.3
동해항 3단계 개발 등 항만개발	2194
패럴림픽 및 관광개발 사업	596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1991
농산어촌 개발 등 지역발전사업	5561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 및 보건사업	1조 3061
동해안 군 경제활력 철거	57
삼척 이사부역사문화창조사업	15

도내 중점 추진 사업 중 미반영 내역
•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 가리왕산 산림 생태복원 사업
• 정태터널 재난대비 특수차량 보장
• 설악산 오색사도 설치
• 강원도 동해안 건강·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비
• 함동해수욕장대응단 설치에 따른 특수장비 확충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정비비
• 국립산림복지단지 시범모델 유지
•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
• 백두대간 문화화려도 연계협력사업
• 국립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지
• 영대 전문연구센터 건립
•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 춘천-철원 고속국도 건설
• 제천-삼척 고속국도 건설
• 삼척-제천 철도건설

보건·복지·안전에 3조 5000억 집중

도 2018년도 국비 확정
3대 핵심 신규 SOC 모두 제외
중장기 발전전략 수정 불가피

강원도의 2018년도 국비가 올해보다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5조 3025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국비는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안전 등의 부문에 집중됐다. 도는 평창올림픽 관련 대형 SOC사업 지원으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갔지만 내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은 57개가 포함, 65억 중장기 발전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의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 예산 부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민생안정 및 국민안심으로 총 3조 5103억원이 확보됐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 및 보건분야 사업에 1조 3061억원이 포함될 것을 비롯해 △다목적 농촌 우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76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23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82억원 △동해안 군 경제활력 철거 57억원 등이 담겼다. 노후상수도 정비 및 상수도시설 확

충관리 등 582억원을 포함한 농산어촌 개발 등 지역발전사업은 5561억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부문은 199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경제활성화 부문에 도가 미래 산업으로 제시한 전기차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69억원)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SOC사업은 9501억원으로 확보됐다. 원주-제천 철도(1500억원), 포항-삼척 철도(1246억원) 등이다.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100억원을 확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대로 이달 중 이뤄지면 내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은 57개가 포함, 65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제2경춘국도 건설은 타당성 조사 평가비로 2억원, 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용역비는 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올림픽 사후관리 예산은 모두 불발된 가운데 올림픽 시설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사후관리 용역비 확보를 올림픽 시설의 국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억원 등 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 273억원, 패럴림픽 및 관광개발 사업 586억원 등이 담겼다. 박지은